

K-게임 쟁권李 대통령... “정책 방향 바뀌, 기회로 만들 때”

게임 ‘4대 중독’ 프레임 전환
李 대통령 “억압 아닌 지원”
게임산업 일자리 질도 강조
수출 효과산업 육성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운영하는 PUBG(펍지)를 방문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면서, 이제는 (게임산업 지원) 정책 방향도 바꾸고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PUBG 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실이 이번주를 ‘문화강국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게임 산업을 지원했던 사례를 회상하며 “당시 정부의 기본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크래프톤’ 신작 게임 ‘인조이’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커녕 억압을 하는 바람에 당시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만화가계에서 만나오면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

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까, 과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해서 게임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은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게 관심사”라며 “(게임 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노동시간 잔적 운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

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조금 전에 한 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000억(원)이었다는데, 거기 직접 종사자가 수백명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이것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정부는 회복 대책... 단체는 ‘주휴수당 폐지’ 100만 서명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대책
대출 300만명 부실평가 착수
단체들, 주4.5일제 반대 돌입
“근기법 확대면 생태계 붕괴”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윈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 등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파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윈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

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쳐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재생에너지 확산 타고 ESS 급부상... 배터리업계, 새 활로 모색

재생에너지 예산 42% 증액
정책·시장 맞물려 성장 가속

전기차 시장 정체(캐즘)가 지속되면서 배터리업계가 ‘두 번째 성장축’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선택했다. 불안정한 전기차 수요를 대신해 장기 계약 중심의 산업용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다. 정부 정책과 기술 진보를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85GWh에서 2035년 약 1232GWh까지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전기를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숨은 심장’으로 불린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대규모 저장 장치가 필수다.

ESS 시장이 6배 커지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생산을

보완할 수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 역시 ESS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꺾이면서 기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생산라인의 가동률은 떨어졌고,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도 악화됐다.

반면 ESS는 공공기관·발전사 등 대형 고객을 상대로 한 장기 계약이 많아 매출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성도 적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사업 선전에 힘입어 올해 3분기 6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플랜트 단동 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오하이오 혼다 합작 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 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 공장, 애리조나 단독 공장 등을 건설 중이다.

지난상반기 기준 북미에서만 50GW가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지난 7월에는 43억9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ESS 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확산도 ESS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은 기후와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발전이 불규칙해질수록 남은 전력을 저장할 장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산업용 ESS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원, 이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8973억원) 대비 42% 증액된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